

기대와 우려의 한일정상회담

양기웅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I. 2008년 4월 한일정상회담
- II. 한일 FTA를 보는 시각
- III. 역사문제를 보는 시각

I. 2008년 4월 한일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4월 21일 도쿄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한일 정상은 2004년 이후 중단된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오는 6월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한일무역수지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기업의 한국투자활성화와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한국 내 설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 다른 합의사항으로는 한일 간 취업관광사증제도(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의 활성화(2012년까지 1만명 수준으로 확대), 정상간 셔틀외교의 복원,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확대와 한일 신시대의 개척,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각 협력관계의 강화,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에너지 문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원조 및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강화 등이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4월 20일 일본에 도착해서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사과를 해야 진정한 사과지 억지로 한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일본에 만날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1일 후쿠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과거사 문제는 일본이 할 일이고 우리가 미래로 가는데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일부 일본 정치인의 거북한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인의 발언에 일일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의 한일정상회담을 살펴보면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한다. 한일무역수지적자 문제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그 해법을 찾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일정책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대일무역수지 적자문제는 치명적으로 심각한 수준이고 반드시 그 해법을 찾아야 하는 중대한 국가과제이다. 역대 어떤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대일무역수지적자의 규모는 커져만 왔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부품소재공단’ 한국 내 설치라는 경제 해법이 제시된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대일무역수지 적자는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대일무역수지 적자는 우리보다 더 심각하고(미국의 2006년 대일무역적자액은 약 884억 달러) 거의 모든 해법을 다 실험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상회담의 ‘부품소재공단’ 설치 합의를 계기로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무역수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한일 무역역조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한일 FTA 체결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역사문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접근방식에는 우려감이 느껴진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경제적 실익을 우선시 하자는 주장을 반대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문제를 덮어둔다고 해서 한일관계가 좋아질지는 의문이다.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면 역사문제를 덮어두고 과거와 미래를 분리하겠다고 했던 정권의 대일정책은 거의 모두 실패했다. 한국측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가자고 할 때 일본측은 역사마찰의 원인을 제공해왔다. 2005년의 노무현 정부와 고이즈미 정부의 한일관계를 상기시켜보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2004년 12월 18일 가고시마(鹿兒島)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자신의 임기 중에는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5년 들어서 일본 시네마현의 독도 조례안 통과, 우익교과서 검정통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역사문제, 일본대사의 독도발언과 독도분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초강경의 대일독트린을 발표했고 한일관계는 경색되었다. 앞으로도 일본측에 의한 역사마찰은 빈번하게 재발될 것이다. 한일관계에서 ‘역사와 미래’는 수레의 두 바퀴이다. 두 바퀴가 동시에 굴러야 수레는 굴러간다.

II. 한일 FTA를 보는 시각

이번 회담에서 일본측은 한일 FTA 협상재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후쿠다 총리가 오늘 정상회담에서 한일 FTA의 필요성을 3번이나 거듭 제안했다"며 "한일 FTA에 대한 일본측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FTA가 필요하지만 3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해소할 부품산업의 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이것이 FTA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일 정상은 한일 FTA 협상을 6월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2007년 대일 무역적자는 300억 달러가 넘었다. 한국은 중국, 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무역흑자를 거의 전부 일본에게 넘겨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유럽연합(EU)과의 FTA가 대일 무역적자 해소의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미국-유럽연합과의 FTA 협상이 급진전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고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염두

에 두고 지난 80년대 임금경쟁력 약화로 떠난 일본기업들이 한국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판단하고 이 대통령은 일본 경단련 주최 오찬에서 '일본기업 전용 부품·소재공단'을 제안했다.

한일 FTA는 1998년 11월 말에 쿠알라룸푸르 APEC 정상회의 계기의 각료간담회에서 요사노 가오루 일본 통산산업상이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양국 간 공동연구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11월 28~29일 김종필 총리와 오부치 총리의 회담에서 한일 FTA 창설에 대한 양국의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국 정부는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Korea-Japan FTA Joint Study Group)를 발족시킴으로써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양국은 2000년 5월 발표된 양국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국의 시장통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포괄적 경제협력의 내용을 가지는 한일 FTA 체결의 필요성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후 8차에 걸친 양국 공동연구회의가 진행되었고, 마침내 2003년 12월 22일에 양국 정부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제1차 한일 FTA 협상이 개최되었다. 하지만 한일 FTA 협상은 2004년 11월 3일, 제6차 협상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한일 FTA 협상이 교착된 배경에는 경제적인 원인과 정치적인 원인이 있다. 첫 번째의 교착 원인은 심각한 수준의 대일무역수지 적자 문제에 대한 우려이다. 한일 FTA는 한국의 대일무역수지 적자폭을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1999년 6월 '수입선다변화' 정책이 완전히 폐지된 이후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다(대일적자=1996년 약 156억달러, 1997년 131억 달러, 1998년 46억 달러, 1999년 82억 달러, 2000년 113억 달러, 2001년 100억 달러, 2002년 147억 달러, 2003년 190억 달러, 2007년 300억 달러). 한일간의 관세율 차이(일본 2.9%, 한국 9.19%)를 고려한다면 관세철폐는 대일수입의 급증과 무역불균형의 심화를 초래할 위험이 아주 크다. 특히 자동차, 전자, 기계부품, 선박 등의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여 협상초기에 한일 FTA의 체결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에서도 신중론이 대두되었다. 두 번째의 교착원인은 노무현 정부와 고이즈미 정부 사이의 관계악화를 들 수 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초강경의 대일독트린을 발표하였고 2005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진행되던 한일 FTA 협상은 중단되었다.

한일관계가 새롭게 복원되고 일본측이 농산물 분야를 양보하더라도 한일 FTA체결은 신중하고 한국측의 관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끈기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한일 FTA는 한국의 관심분야가 포함된 포괄적 수준의 FTA를 추진해야 하고 협상시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여 농수산물 분야 양허를 포함하여 비관세조치의 개선, 정부조달시장 진출확대, 산업협력 확대 등 한국의 주요 관심사항이 협상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

역역조가 더 나빠질 것을 예상해서 긴급수입 제한조치 등의 안전장치를 치밀하게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정부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을 국가적 의제 차원에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한일 FTA의 체결은 대통령의 추상적인 비전이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냉철한 손익계산과 기다림의 미덕이 필요한 것이다.

Ⅲ. 역사문제를 보는 시각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일본에 만날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과거사 문제는 일본이 할 일이고 우리가 미래로 가는데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 ‘(일부 일본 정치인의 망언에 대해서)’ 정치인의 발언에 일일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미래와 경제’를 우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역사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역사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측이 역사문제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둔다고 해서 일본측이 반드시 이에 호응하여 역사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보통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을 위하여 새로운 집단기억을 사회적으로 구성해가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집단기억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 한국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을 수 없는 ‘과거의 망각과 왜곡’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한일역사마찰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정부간의 ‘신시대’ 합의를 뒤집을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아스만(Assmann)에 의하면 문화적 기억은 첫째, 정체성의 응결(concretion)을 가져온다. 특히 이런 정체성 응결의 과정이 과거의 중요한 사건과 연관될 때 정체성은 집단기억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들게 된다. 둘째, 문화적 기억은 생산성을 지닌다. 기억은 과거를 ‘있었던 그대로’ 기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의 전거(frame of reference)에 맞추어 재구성하려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셋째, 이런 생산성과 문화적 기억의 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문화적 기억은 복잡한 제도화의 과정을 겪는다. 즉 주관적인 기억이 확정되고, 객관화되고, 조직화되고, 기념되고(monumentalized), 재교육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문화적 기억이 생겨난다. 이러한 제도화의 과정은 문화적 매개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문화적 매개체가 공식적이고 성문화된 텍스트뿐 아니라 구전적, 시각적, 청각적 매개체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화의 영향으로 문화적 기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교화(cultivation)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 지점에서 집단 기억은 국가적인 차원의 교육과 만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기억은 특정한 가치의 체계, 즉 당위적인 자기 이미지(normative self-image)를 만들어 낸다.

한일의 역사문제는 미디어와 국가권력을 매개하여 ‘집단기억화’ 한다. 이 과정에서 기억의 선택, 배제, 폐기, 망각, 변형, 치환 등의 사회적 구성이 발생한다. 일본은 이른바 ‘보통국가’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가기 위해 ‘기억의 선택, 배제, 폐기, 망각, 변형, 치환 등의 사회적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일의 역사는 망각되고 변형되기 쉽기 때문에 역사마찰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한일의 역사는 ‘사실관계의 역사’ 이면서 ‘정치화된 역사’ 혹은 ‘기억의 역사’ 이기도 하다. 따라서 역사문제를 한일 양국의 정체성 형성, 집단기억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고 미디어와 국가권력에 의하여 집단기억이 형성/재생산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일본의 어떠한 주관적 기억이 집단기억으로 확정되고 객관화되고 조직화되고 기념되고 재교육되는가에 주목하면서 ‘왜곡과 망각의 기억화’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공론으로 대응해야 한다. 일본 정치가에 의한 망언도 집단기억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발언에 일일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의 신문에 보도된 일본망언 사례를 조사해보면 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의 역사의 망언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4년 역사마찰 발생건수는 4건으로 급증하고 1996년 9건,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 망언사례가 급감했다가 2001년에 들어 다시 4건으로 급증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2003년 6건, 2004년 4건 그리고 2005년에는 10건이나 발생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한일관계가 가장 경색된 2006년에는 망언사례가 2건 뿐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험적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한국측의 정부 출범 초기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주창되었다가 2-3년 이내 일본측의 역사망언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악순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과 한일관계가 긴장할 때 일본측의 망언사례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이 대통령의 ‘과거사 문제는 일본이 할 일이다’는 발언은 ‘역사마찰의 역사’를 살펴본 후에 했어야 하는 말이다.

역사문제는 회피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미래와 과거를 동시에 다룰 때 한일관계는 건강하고 보다 생산적일 수 있다. 역사마찰에 대한 한국측의 대응도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 역사문제는 집단기억화의 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아이덴티티를 응결시키고 미래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기억하려는 한국측의 노력과 의지도 일본의 집단기억 속으로 각인되어 들어가야 한다.(2008/05/02)

